

주간 통일정세

2017-44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군사
3. 경제
4. 사회문화
5.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1.4	北 김정은, 트럭공장 시찰...“현대적 자동차공업 창설”(연합뉴스)
		北 대표단, 적십자사총회 참석차 터키행(연합뉴스)
		北 김영남, 증산 성과낸 탄광 시찰...‘자력갱생’ 강조(연합뉴스)
	11.7	北 청년동맹 수장 교체...전용남→박철민(연합뉴스)
		北,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제재 대응책 논의(연합뉴스)
		北 신문, 겨울철 물고기 잡이 독려...“바다 한시도 비우지 말라”(연합뉴스)
군사	-	-
경제	-	-
사회	-	-
문화	-	-
외교 국방	11.4	北 “美, 비핵화 협상 꿈도 꾸지 말아야(연합뉴스)
	11.5	北 신문, 방한 앞둔 트럼프 겨냥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연합뉴스)
		北 “무차별적 제재, 극악한 인권유린행위” 주장(연합뉴스)
	11.6	北, 유네스코서도 ‘대북제재’ 비난...“반인류·반문명적”(연합뉴스)
	11.7	北 신문, 트럼프 방한일에 “핵보검 더욱 억세계 버릴 것”(연합뉴스)
	11.9	北, 국제기구의 대북 금융제재 비난...“불공정한 처사”(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수행자	비고
114	3월 16일 공장 현지지도	오수용, 박태성, 홍영철, 조용원, 유진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11. 4.

■ 北 김정은, 트럭공장 시찰…“현대적 자동차공업 창설”(연합뉴스)

- 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동지께서 ‘3월 16일 공장’을 현지지도하고 현대화 과업을 제시했다”라며 김 위원장이 “우리 식의 대형윤전기재(트럭)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공장 근로자들을) 치하했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총조립직장, 종합가공직장, 제관직장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둘러보며 “3월 16일 공장을 현대화함으로써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자”고 독려함.
- 특히 그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에서 질 좋은 기관들이 팡팡 생산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자동차 생산과 연관된 부문들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한 것만큼 3월 16일 공장을 모체로 하여 현대적인 자동차공업을 창설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11. 4.

■ 北 대표단, 적십자사총회 참석차 터키행(연합뉴스)

- 북한 적십자회 대표단이 터키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집행부위원장 백용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대표단이 터키에서 진행되는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 제21차 총회와 대표이사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밝힘.

■ 北 김영남, 증산 성과넌 탄광 시찰…“자력갱생” 강조(연합뉴스)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

- 소에서 최근 증산 성과를 거둔 탄광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밝힘.
- 중앙통신은 이날 “김영남 동지가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2·8 직동청년탄광을 돌아보았다”며 “김영남 동지는 김유봉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혁신자들을 만나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축하해 주었다”고 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석탄 증산 성과로 받들어 온 전 세대 탄부들처럼 당의 영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며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 정신으로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 것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밝힘.

2017. 11. 7.

■ **北 청년동맹 수장 교체…전용남→박철민(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 9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평양에서 열렸다고 “회의에서는 전용남 동지를 사업상 관계로 소환하고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로 박철민 동지를 선거(선출)하였다”라고 밝힘.
- 2012년 3월 청년동맹 1비서에 임명된 전용남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으로 보선됐으며, 2014년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으로 선출됐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 등에 이름을 올렸음.
- 한편 신임 청년동맹 1비서 박철민은 지난해 8월 청년동맹의 ‘2인자’인 조직담당 비서 자리에 올랐으며, 지난달 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음.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11. 7.

■ **北,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제재 대응책 논의(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의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보도를 인용해 “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를 토의하였다”고 보도함.
- 통신은 “(회의에서는) 지난 시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 총화하고 자력자강의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밝힘.

- 이어 “회의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동력과 식량, 원료와 자재의 자급자족을 인민경제 주체화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최단 기간에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위원회, 성, 해당 기관들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였다”며, 이와 관련하여 회의에서는 경공업 생산 활성화에 긴요한 과학기술, 인민들의 식량 문제 해결에 과학연구 역량·자금 집중, 책략 있는 대외무역 활동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고 통신은 전함.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11. 7.

■ 北 신문, 겨울철 물고기 잡이 독려…“바다 한시도 비우지 말라”(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7일 1면에 게재한 사설에서 “겨울철 물고기잡이는 연간 수산물 생산에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전투”라며 “수산 전선에서 겨울철 물고기잡이 전투를 어떻게 치르는가 하는 데 따라 수산물 생산계획 수행의 성과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고 밝힘.
- 이어 “앉아서 물고기 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우는 소리, 조건 타발(투덜거림)을 할 것이 아니라 바다를 맨 앞장에서 정복해가는 기수가 되어 어로공들의 정신력, 자력자강의 위력을 총폭발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수산부문에서 지금의 하루하루는 보통 때의 열흘, 한 달 맞잡이로 귀중한 시기”라며 “바다를 한시도 비우지 말고 분초를 쪼개가며 포위섬멸전을 벌여 한 마리의 물고기라도 더 많이 잡아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어로 활동의 과학화와 현대화, 잡은 물고기를 적시에 질적으로 가공하는 문제 등을 강조하기도 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 특이사항 없음.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다.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11. 4.

■ 北 “美, 비핵화 협상 꿈도 꾸지 말아야(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4일 ‘적반하장의 극치, 얼빠진 망상을 거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을 철회할 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과 그에 따른 원칙적 요구를 그 무슨 ‘전제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포악하게 달려드는 날강도 앞에서 주먹을 풀고 무릎을 꿇으라는 것과 같은 괴롭치한 꾀변”이라고 비난함.
- 그러면서 논평은 “조선은 대화를 반대하지 않지만, 공화국의 최고 이익과 인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를 놓고 절대로 흥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대화와 협상에는 추호의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힘.
- 이어 “미국은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종착점에 다다른 우리가 현 단계에서 저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으리라는 얼빠진 망상을 버려야 하며 특히 우리와의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임.

2017. 11. 5.

■ 北 신문, 방한 앞둔 트럼프 겨냥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이틀 앞둔 5일 “트럼프 패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면서 “과멸을 면하려거든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라”라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이날 ‘재난을 몰아오는 언동’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우리의 초강경 의지를 오관하고 감히 무모하게 덤벼든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힘을 총발동하여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이같이 밝힘.
-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현실을 볼 줄 모르는 정치문외한’, ‘과대망상증에 걸린 정신병자’, ‘불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 등과 같은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트럼프가 우리를 ‘불량배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이미 유엔 무대에서 철회(떠든)바와 같이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를 대조선정책의 최종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모든 것을 지향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변함.

2017. 11. 7.

■ **北 신문, 트럼프 방한일에 “핵보검 더욱 억세게 버릴 것”(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자멸을 재촉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 소동’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정세논설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적대 행위와 침략 책동이 지속되는 한, 지구 상에 불의와 악의 화근인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정의의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버려갈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미제 호전광들은 트럼프의 아시아 행각 기간 그 누구의 도발이 예상된다고 떠들면서 3개의 핵 항공모함 타격단을 조선반도(한반도) 주변 수역에 끌어들이며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면서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 “미제가 핵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따위로 우리를 위협하며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데 대처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째 들어내기 위한 정의의 힘을 더욱 굳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11. 5.

■ **北 “무차별적 제재, 극악한 인권유린행위” 주장(연합뉴스)**

- 제네바 유엔사무국 및 국제기구 주재 북한 상설대표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공보문에서 “지금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 주도의 야만적인 제재압박 소동은 인민들의 인권 향유를 각방으로 방해하고 위협하고 있으며 현대판 인권유린, 대량학살행

위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규탄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북한 대표부는 “특정 국가들의 이해 관계와 강권 행위에 눌리워 비법조작된 대조선(대북) 제재결의들은 그 법률적 기초와 채택 동기, 내용에 있어서 보편적인 국제법적 원칙에 위반되는 비법 문서, 전례없는 반인권문서”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미국의 끈질긴 압력으로 일부 좃대없는 나라들은 대조선 제재결의 이행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환자들과 어머니 및 어린이 건강을 위한 의료설비와 의약품들이 납입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있다”며 “학생용 교구 비품생산과 지어(심지어) 어린이 영양 식품 생산부문에까지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2017. 11. 6.

■ 北, 유네스코서도 ‘대북제재’ 비난…“반인류 반문명적”(연합뉴스)

- 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장은 지난 3일 유네스코총회 제39차 회의 전원회의 연설을 통해 자신들의 교육, 과학중시 정책을 설명하면서 “우리 인민의 노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우리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의 위협과 제재는 교육, 과학, 정보통신 분야는 물론 체육 부문과 인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부정적 후과(결과)를 미치고 있다”면서 “현대문명을 파괴하는 이러한 반인류적, 반문명적 행위들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또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군사적 위협·압박이 “유엔현장과 유네스코의 사명과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라며 “문명 강국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요인”이라고 비난함.

2017. 11. 9.

■ 北, 국제기구의 대북 금융제재 비난…“불공정한 처사”(연합뉴스)

- 북한의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은 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FATF의 대북 성명에 대해 “미국의 압력에 따라 극도로 정치화된 기구 측의 불공정한 처사로 되며,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배격한다”고 밝힘.
- 그러면서 “이러한 기구 성명 채택에는 우리의 핵 무력 강화를 가로막기 위하여 민수 목적이든 군수 목적이든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거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대조선 제재 결의 위반으로 몰아 차단하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범죄적 기도(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함.

- 이어 “우리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자금 세척(세탁), 테러 및 대량살육무기 전과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합류할 것이지만, 우리의 핵무기를 빼앗아보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Ⅲ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관계	11.5	한미 외교장관 통화...“틸러슨, 한중 관계개선 협의결과 환영”(연합뉴스)		
	11.6	국방부 “전작권 조속 전환 노력...한미간 긴밀한 공조”(연합뉴스)		
	11.7			트럼프 “한국과 위대한 협력...美일자리 만들어 여기 왔다”(연합뉴스)
			文대통령 “북핵 해결 전환기대”...트럼프 “북한 문제가 중심의제”(연합뉴스)	
				트럼프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 무역협상 이끌어낼 것”(연합뉴스)
				트럼프 “한국, 수십억 달러 달하는 무기 주문할 것”(연합뉴스)
		트럼프 “코리아 패싱 없어”...한미,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자유아시아방송)		
	11.8		한미 정상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진전시킬 것”(서울경제)	
			한미 “北 비핵화 대화 복귀 위해 국제사회와 압박 확인”(연합뉴스)	
				트럼프 “韓, 자유와 문명 성취” 찬사...북한에는 “압제와 파시즘”(연합뉴스)

			美전문가들 “한미정상회담 대북기조 엇박자 없었다”(연합뉴스)
	11.9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준비 본격화...전담대사에 장원삼 내정 (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1.6	외교부 “연내 정상 방중·중정상 내년 방한 추진”(연합뉴스)	
			“中, 19차 당대회 대표단 방한 추진...사드 이후 첫 고위급 방문” (연합뉴스)
	11.7		中, 강경화 ‘북핵 평화적 해결’ 발언 지지 “각국 이익에 부합”(연합뉴스)
	11.8		中매체 “韓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관련국에 군비경쟁 촉발 우려” (연합뉴스)
	11.9	외교부 “中, 北 인근국가로서 북핵해결 중요 역할해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1.7		日정부, 韓공식만찬 ‘위안부피해자 초대에 ‘우려’ 전달(연합뉴스)
	11.9		‘허절린’ 日, 한미정상만찬 위안부할머니·독도새우 문제 연일제기(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1.4	트럼프 방중 앞두고 美·中 마약진통제 출처 논쟁(연합뉴스)	
			中 "미국내법으로 중소기업 제재 반대"...대북정책 기조 유지할 듯 (연합뉴스)
			중국, 미군 전략자산 전개에 "긴장고조 말아야"(연합뉴스)
	11.6		中, 트럼프의 감정온과 조건부대화 용의에 "모든 접촉 환영"(연합뉴스)
	11.7		주중 美대사 "美中정상회담 현안, 한반도문제·무역 불균형"(연합뉴스)
		맥매스터 "中 '쌍중단'으로 북핵 해결 못해...제재가 최선책"(연합뉴스)	
	11.8	트럼프 방중 앞두고...美상원 은행위 '워비어법' 처리(연합뉴스)	
			中, 트럼프 '대북압박' 촉구에 "안보리 결의따라 대북제재 이행"(연합뉴스)
	11.9	트럼프·시진핑, 북핵 소통강화 합의...무역불균형 갈등 '봉합'(연합뉴스)	
		트럼프 "가장 큰 위협은 북한...비핵화에 중국 역할해야" 강조 (연합뉴스)	
			중국 외교부 "미·중 정상,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안 해"(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1.5	트럼프 “무사의 나라 日, 北미사일 요격 안한 것 이해 안 돼”(연합뉴스)		
		트럼프 “지금보다 더 일본과 가까웠던 적 없다”...아베와 만찬 (연합뉴스)		
		美日정상 골프회동...“대북대응·무역문제 의견 교환도”(연합뉴스)		
	11.6	트럼프 “日과 무역 공정치않다...美 오랜 기간 대일무역적자 겪어” (연합뉴스)		고노 日외무상 “美틸러슨과 ‘대북 압력 효과’ 인식 공유”(연합뉴스)
		美日정상, 北 “문명세계 위협” 비판...‘인도-태평양전략’ 中견제(연합뉴스)		
		트럼프·아베 “대북 압력 최대한 강화”...한미일 공조 의견일치(연합뉴스)		
		’이견보인’ 美日정상회담발표문...‘무역적자·주일미군’ 표현 달라(연합뉴스)		
	11.7		日언론 “미일정상회담서 대북군사행동 관련 논의 있었다” (연합뉴스)	
	11.8		日관방 “北규탄·동맹국 수호’ 트럼프 국회연설 높게 평가” (연합뉴스)	
	11.10	트럼프, 아베에 “무역적자 해소 조속히 결과 내라” 압박(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1.5		크렘린 “美-러, 북핵 관련 아무런 협력 안해...의견 교환만”(연합뉴스)	
	11.7		크렘린 “푸틴-트럼프, 베트남 APEC서 북핵 등 논의 예상” (연합뉴스)	

	11.8		러, '북한 고강도 압박' 트럼프 요구에 부정적 입장 밝혀(연합뉴스)
	11.9		크렘린 "북핵 해결 공조 트럼프 호소, 푸틴 견해와 같은 맥락"(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1.9		"디아베, 동남아순방서 중시진핑·리커창과 개별 회담 예정" (연합뉴스)
			외관방장관 "중국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실행해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11.5	중-러, 북극해 항로 개발 '빙상 실크로드' 구축 가속화(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11. 5.

■ 한미 외교장관 통화…“틸러슨, 한중 관계개선 협의결과 환영”(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장은 5일 아침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 관련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평택 기지 방문, 국회 연설 등 이번 방한시 계획된 상징성 있는 일정들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가 한층 부각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함.
- 틸러슨 장관은 이번 방한을 통해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 한미 동맹의 중요성 부각,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 긍정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아울러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해제 및 한중 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외교적 기반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2017. 11. 6.

■ 국방부 “전작권 조속 전환 노력…한미간 긴밀한 공조”(연합뉴스)

- 국방부는 6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하에 추진 중이라고 밝힘.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을 조속하게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고 답변함.

2017. 11. 7.

■ **트럼프 “한국과 위대한 협력…美일자리 만들러 여기 왔다”(연합뉴스)**

-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7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 주한 미군 장병들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한국과) 위대한 협력이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함.
-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잠시 후 문 대통령, 그의 대표단과 함께 곧 무역에 관해 예정된 훌륭한 미팅을 한다”며 오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무역 문제를 주로 언급할 것임을 시사함.
- 이어 “바라건대 그 회의가 잘 풀려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함.

■ **문대통령 “북핵 해결 전환기대”…트럼프 “북한 문제가 중심의제”(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빈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가진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국민에게 안심이 되고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은 매년 7천억 달러의 군사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투기 등 무기와 더 많은 군사시설을 확충할 생각”이라며 “미국 무기는 최상급으로, 한국이 미국의 많은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데 감사드린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장비를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여러 나라와 무역적자 상태를 원치 않는다.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북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중심 의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 성공적인 해결책이 있길 바란다”고 발언함.

■ **트럼프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 무역협상 이끌어낼 것”(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 “나는 우리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양국 경제관계를 제고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했으며, “지금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기존의 입장을 강조함.

-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우리는 한미동맹의 한 축이 경제협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대한 요소라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으며, 이어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함.

■ 트럼프 “한국, 수십억 달러 달하는 무기 주문할 것”(연합뉴스)

- 7일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자산 획득’과 관련하여 질문받고 “첨단 정찰자산을 비롯한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전략 자산 획득에 대해 한미 간에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것은 우리 한국의 자체 방위능력과 한미연합 방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 문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첨언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상당한 부분을 획득하기로 말했다”며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말했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한국이) 주문할 것이고, 이미 승인 난 부분도 있다”고 설명함.

■ 트럼프 “코리아 패싱 없어”…한미,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자유아시아방송)

- 7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며,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양국은 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 순환 배치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최종 합의함.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전세계적인 위협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책임 있는 국가들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종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함.
-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게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며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하여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를 일축함.

2017. 11. 8.

■ **한미 정상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진전시킬 것”(서울경제)**

- 8일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의 3국 간 안보협력을 진전시켜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경보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공동대응 능력을 증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함.
- 발표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상당한 규모의 대한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더욱 확대되고 균형되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균형되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적시함.
- 또한 “양 정상은 통상담당 관리에게 조속히 개선된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명시함.

■ **한미 “北 비핵화 대화 복귀 위해 국제사회와 압박 확인”(연합뉴스)**

-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은 8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양 정상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 및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며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해나가는 것에 완전한 지지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발표함.
-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및 2375호를 포함,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함.
-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며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전력 등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고 확인함.
-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중국이 고유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고 강조함.

■ **트럼프 “韓, 자유와 문명 성취” 찬사…북한에는 “압제와 파시즘”(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국회 연설에서 남북 분단과 6·25전쟁 이후 남북한이 걸어온 길을 극적으로 대비하며 한국의 정치·경제적 성취를 극찬했으며,

- 북한에 대해서는 억압과 경제적 궁핍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활상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향한 강력한 비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함.
- 트럼프 대통령은 “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할 당시 아름다운 서울의 대부분은 초토화됐다”고 언급한 후 “하지만 전 세계가 알다시피, 두 세대가 지나 기적과 같은 일이 한반도 남쪽에서 일어났다”며 “한국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높이 평가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기적은 자유국가의 병력이 1953년 진격했던 곳 24마일 북쪽에서 모두 멈췄다”며 “번영은 거기서 끝나고, 북한이라는 감옥국가가 시작된다”고 비교함.
 - 그는 “하나의 민족, 두 개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언급한 뒤 한국에 대해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고 자유와 정의, 문명과 성취라는 미래를 선택했다”고 평가한 반면 북한을 겨냥해선 “다른 한쪽은 부패한 지도자가 압제와 과시즘, 탄압이라는 기치 아래 자국민을 감옥에 넣었다. 역사의 실험실에서 벌어진 비극적 결과”라고 비판함.

■ **美전문가들 “한미정상회담 대북기조 엇박자 없었다”(연합뉴스)**

-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은 7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대북 기조를 놓고 이견 없이 대체로 일치된 시각을 보였다고 평가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공격적이고 선동적인 발언을 자제 한 채 대북발언의 수위를 한층 낮췄다고 분석함.
- 차기 주한 미국대사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공동 기자회견은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견해의 일치를 반영했다”면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오랜 역사를 인식하면서 한국의 방어를 지원하겠다고 분명하게 언명했다”고 강조함.
-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제재에는 단호하되 의미 있는 대화에는 문이 열려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반향을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대북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말하고 있다”고 밝힘.

2017. 11. 9.

■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준비 본격화…전담대사에 장원삼 내정(연합뉴스)**

- 한미정상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 원칙에 양국이 의견을 모음에 따라 정부가 2019년 이후분 분담금 협상에 나설 전담 대사를 장원삼 주 스리랑카 대사로 내정하는 등 협상 준비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9일 전집.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방위비분담 협상을 담당할 수석대표에 대한 인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적절한 시점에 대외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힘.
-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협상 담당 대사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연내에 양측간에 예비적인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관측함.

나. 한·중 관계

2017. 11. 6.

■ **외교부 “연내 정상 방중·중정상 내년 방한 추진”(연합뉴스)**

- 외교부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2018년도 외교 추진방향 및 예산/기금 개괄’ 자료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하겠다고면서 “연내 정상 방중 및 내년 중국 정상 방한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교류·협력 발전 및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함.
- 외교부는 또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더 이상 양국 관계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소통·관리”하겠다고 밝힘.
- 이와 함께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중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설명함.

■ **“中, 19차 당대회 대표단 방한 추진…사드 이후 첫 고위급 방문”(연합뉴스)**

- 6일 베이징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외교 소식통은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주요국을 대상으로 19차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도 대표단이 방문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 고위급 관계자가 연내 방한해 국내 정당 측과 만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함.

- 중국 대표단의 방한이 성사되면 지난해 7월 사드 갈등이 본격화한 뒤 이뤄지는 첫 번째 중국 고위급 인사의 한국 방문이 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함.

2017. 11. 7.

■ 中, 강경화 ‘북핵 평화적 해결’ 발언 지지 “각국 이익에 부합”(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한반도에서 다신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이 지지를 표명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평론을 요구받고 “중국은 일관되게 정치·외교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주장해 왔다”면서 “이는 각국 공동 이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관련 결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함.
- 그는 이어 “우리는 유관 각국이 이와 관련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발언함.

2017. 11. 8.

■ 中매체 “韓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관련국에 군비경쟁 촉발 우려”(연합뉴스)

-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한 강한 수사를 누그러뜨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은 관련국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8일 보도함.
- 뤼차오(呂超) 라오닝(遼寧)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한국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없앤 것은 한국이 한반도를 넘어서는 무기를 갖추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흔들고 지역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함.
- 중국의 군사전문가인 쑹중핑은 “탄두중량 해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발언함.

2017. 11. 9.

■ 외교부 “中, 北 인근국가로서 북핵해결 중요 역할해야”(연합뉴스)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정상회담 기자회견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해결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 “중국이 북한의 중요한 인근국가로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접촉과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발언함.
- 노 대변인은 “미중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이라며 “다만 미중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이를 독려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함.
- 노 대변인은 또 8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한 한미 공동언론발표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 한국의 어떤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이 새로 제시한 전략은 우리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고 답변함.

■ 중국, 한국·일본산 합성고무(NBR)에 반덤핑 조사 착수(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는 한국,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를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힘.
- 조사는 내년 11월 9일까지 종결될 예정이며, 2019년 5월 9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함.
- 이번 조사는 중국석유천연가스유한공사(中國石油·CNPC) 등이 지난 9월 29일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함.

다. 한·일 관계

2017. 11. 7.

■ 日정부, 韓공식만찬 ‘위안부피해자’ 초대에 ‘우려’ 전달(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한 청와대 공식 만찬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초청된 것과 관련,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또한 스가 장관은 만찬에 ‘독도 새우’가 제공된 것과 관련, “북한 문제에 한미일의 연대 강화가 요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가운데 한미일의 밀접한 연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듯한 움직임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불쾌감을 나타냄.
- 스가 장관은 위안부 문제와 독도 관련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미국에 잘 전달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이해를 얻고 있다”며 “한국에 외교 루트를 통해 우리나라 입장을 확실히 전하고 있다”고 덧붙임.

2017. 11. 9.

■ **‘허짚린’ 日, 한미정상만찬 위안부할머니·독도새우 문제 연일제기(연합뉴스)**

- 우리 정부가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만찬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초대하고 독도 새우를 재료로 한 음식을 만찬 메뉴에 포함시킨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이를 연속 항의했다고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9일 보도함.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급 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전날 현지에서 만난 우리 정부 고위관리에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함.
- 산케이는 고노 외상이 메시지를 통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 재작년 한일합의를 지키라고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11. 4.

■ **트럼프 방중 앞두고 美·中 마약진통제 출처 논쟁(연합뉴스)**

- 미국에서 사회 문제화된 아편계(opioid) 진통제 펜타닐(fentanyl)의 주요 출처가 중국이라는 지적을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논쟁이 일고 있음.

- 4일 중국 법제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마약금지위원회(NNCC) 관공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펜타닐이 중국에서 왔다는 주장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함.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이들 약물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어 이달 중국 방문 일정을 언급하면서 “그(시진핑 주석)가 이 문제에 대해 뭔가를 하게 될 것”이라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거론할 뜻을 밝힌 바 있음.

■ 中 “미국내법으로 중소기업 제재 반대”…대북정책 기조 유지할 듯(연합뉴스)

- 4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정쩌광(鄭澤光)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전날 일부 외신을 상대로 한 미중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기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것임을 시사함.
- 정 부부장은 북한 문제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간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충돌 발생에 결연히 반대하며 무력사용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함.
- 또한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통로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 단둥은행에 금융 제재를 한 것과 관련, “미국이 국내법을 이용해 중국 기업에 대해 단독으로 일방 제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힘.

■ 중국, 미군 전략자산 전개에 “긴장고조 말아야”(연합뉴스)

-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항공모함 등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자 불편한 반응을 나타냄.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미국의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와 관련된 질문에 “현재 한반도 정세가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하며 취약한 상황”이라며 “각국이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된다”고 답변함.
-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의 3개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 주변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음.

2017. 11. 6.

■ 中, 트럼프의 김정은과 조건부대화 용의에 “모든 접촉 환영”(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과 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밝힌 것에 대한 평론을

- 요구받고 모든 접촉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화 대변인은 “중국은 북미 양국이 직접 대화와 접촉하길 바란다”면서 “북미는 한반도 직접 당사국으로 모든 형식의 대화와 접촉은 상호 신뢰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와 협상의 정확한 궤도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함.
 - 화 대변인은 지난 8~9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한반도 정세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므로 유관 각국은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언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함.

2017. 11. 7.

■ **주중 美대사 “美中정상회담 현안, 한반도문제·무역 불균형”(연합뉴스)**

-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대사가 일부 외신들과의 단체 인터뷰에서 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문제와 미중 무역 불균형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브랜스테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기간 양국 간 대규모 경제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함.
-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미국 기업 대표단이 에너지, 제조 분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는 경제 협력 증진과 더불어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번영을 원한다”고 발언함.

■ **맥매스터 “中 ‘쌍중단’은 북핵 해결 못해…제재가 최선책”(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7일 중국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위협 중의 하나라며 공동 대응을 강조함.
- 맥매스터 보좌관은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현재로선 대북제재가 최선책이라고 주장함.
- 그는 이어 “비핵화는 유일하게 받아들 수 있는 것이며 전 세계가 협력해 대응해야 하고 중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 특히 무역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함.

2017. 11. 8.

■ **트럼프 방중 앞두고…美상원 은행위 ‘웬비어법’ 처리(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사실상 중국 은행을 겨냥하는 내용의 대북 금융제재법을 7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 의회나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보리 등에 따른 제재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환 계좌 및 대리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토 웬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 개정안을 심의함.
- 이 법안은 북한에 조력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으로, 일차적으로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됨.

■ **中, 트럼프 ‘대북압박’ 촉구에 “안보리 결의따라 대북제재 이행”(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국에 대북 무역 중단을 촉구하는 등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한 데 대해 중국의 대북 제재 방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규정된다고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이 8일 밝힘.
- 화 대변인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국회 연설에서 북핵문제에 관해 언급한 것을 주시했다”면서 “미국 측이 촉구한 내용에 관해 중국은 안보리 결의상 금지사항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고, 이는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라고 반박함.
- 화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에 북중 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금융 거래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 관련) 최신 상황에 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한다”면서 “다만, 중국은 대북 제재 관련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고, 우리가 져야 하는 국제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함.

2017. 11. 9.

■ **트럼프·시진핑, 북핵 소통강화 합의…무역불균형 갈등 ‘봉합’(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9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견제와 압박을 하기로 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와 시 주석은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실천하는 데 동의했고, (북한이) 경솔하고 위험한 행동을 포기하도록 대북 견제와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면서 “모든 국가가 대북 대응 노력에 참여하고 금융 분야에서 대북 관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발언함.
- 이에 시 주석은 “미·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견지할 것이고,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고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견지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함.
-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탓에 생긴 미·중 무역 불균형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시 주석은 과거 미·중 무역 상황을 토론한 바 있으며 절실한 행동을 취해 중국 시장 진입 문제 등 무역 왜곡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함.
-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방금 체결한 협정은 미국에 거대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임.
- 시 주석은 미·중 기업 대표 회담에서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중국의 발전은 미국에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발언했으며, 또 “미중간의 경제무역협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갈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발언함.

■ **中, 트럼프에 ‘바이 아메리카’ 선물보따리…경협사상 최대규모(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보잉, 쉘컴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2천500억 달러 규모의 구매를 진행했으며, 이는 국가간 단일 경제협력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 중국항공기재집단공사(CASHC)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9일 보잉으로부터 370억 달러(약 41조3천억

- 원) 규모의 항공기 300대를 사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중국을 대표하는 휴대전화 제조사인 샤오미·오포·비보도 미국 반도체 제조사 쉐일로부터 총 120억 달러(약 13조4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를 사들이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 전날인 8일에는 중국 2위 전자상거래업체 징둥(京東·JD)닷컴이 향후 3년간 미국 산 소고기와 식료품 20억 달러(2조 2천억 원) 어치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으며, 중국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약도 체결됨.
 - 중산(鍾山) 중국 상무부장은 “양국 기업이 기적을 만들었다”며 “2천535억 달러라는 금액은 미중 경협 사상 최대 규모이며 세계 경협 역사에서도 신기록”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당국자도 이번 미중 경협으로 인해 미국내에서 1만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연간 대아시아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100억 달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트럼프 “가장 큰 위협은 북한·비핵화에 중국 역할해야” 강조(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 대표회담 연설에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고 한국 국회에서 연설했던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역할이 있고, 나는 중국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이를 위해 행동을 취하기를 호소한다”면서 “만약 당신(중국)이 이 문제에 주력한다면 꼭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역설함.
-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함께 단결하며 이(북한) 정권이 더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시진핑 주석에 감사하며 러시아도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하길 호소한다”고 언급함.

■ 중국 외교부 “미·중 정상,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안 해”(연합뉴스)

- 정쩌광(鄭澤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9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9일 밝혔다.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정 부부장은 이날 일부 매체를 대상으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이틀간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시 주석은 한반도 핵

문제에서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재천명했다”고 말했으며, “양국은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지키는 데 동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함.

- 그는 “한반도 정세 발전과 미·중이 취해야 할 조치와 관련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하고, “양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최종 해결할 것이라는 공동 목표를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함.

나. 미·일 관계

2017. 11. 5.

■ 트럼프 “무사의 나라 日, 北미사일 요격 안한 것 이해 안 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지난 8~9월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이 파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요격했어야 했다”고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함.
- 교도통신은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8~20일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과의 전화 회담을 하거나 직접 만나서 회담할 때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함.
-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상공을 미사일이 통과했는데도 왜 쏘아 떨어트리지 않았나”, “무사의 나라인데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말을 하며 일본이 파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함.

■ 트럼프 “지금보다 더 일본과 가까웠던 적 없다”...아베와 만찬(연합뉴스)

-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도쿄의 한 식당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비공식 만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 관계는 정말로 대단하다”고 발언하고, “지금보다 우리가 일본과 더 가까웠던 적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일 동맹을 강조함.
-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아베는 서로를 좋아하고 두 나라도 서로를 좋아한다”면서 아베 총리와 “북한과 무역,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들을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임.
- 아베 총리는 만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기뻐했다”며 “의미 있는 만찬이었다”고 설명함.

■ **美日정상 골프회동…“대북대응·무역문제 의견 교환도”(연합뉴스)**

- 5일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이타마(埼玉) 현 가스미가세 키(霞が関)CC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두 번째 골프회동을 하며 대북대응과 무역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NHK가 보도함.
- 미·일 정상은 ‘도널드&신조: 동맹을 더욱 위대하게’(Donald and Shinzo: Make Alliance Even Greater)라고 적힌 흰색 골프 모자에 함께 서명했으며, 두 정상은 대북 대응과 무역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다고 NHK는 보도함.
-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트럼프의 방문 기간 “북한 정세를 비롯해 국제적인 여러 과제에 대해 차분히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해 골프회동과 6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안 논의와 관계 심화에 공을 들일 것으로 일본 언론은 관측하고 있음.

2017. 11. 6.

■ **트럼프 “日과 무역 공정치않다·美 오랜 기간 대일무역적자 겪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오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미·일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면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교섭을 진행할 생각을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주도로 추진되는 다자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에 대해서도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다”며 재가입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함.
- 트럼프 대통령은 도요타 자동차를 거론하며 “일본의 제조사가 미국에서 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훌륭하다”고 말하면서도 “일본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의 차 판매가 저조하다”고 불만을 표명함.

■ **고노 日외무상 “美틸러슨과 ‘대북 입력 효과’ 인식 공유”(연합뉴스)**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5일 방일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대북 경제제재 등 압력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힘.
- 고노 외무상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언급을) 삼가겠다”고 답변함.
- 고노 외무상과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는 6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짐.

■ 美日정상, 北 “문명세계 위협” 비판…‘인도-태평양전략’ 中견제(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이 “100% 함께 있다는 것을 강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함.
-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이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이 정책을 바꾸도록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이자는데 완전히 의견이 일치했다”며 “중국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서도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문명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목하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함.
- 아베 총리는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지지를 표했으며,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자산동결 대상을 35개 단체와 개인으로 확대한다며 추가적인 독자제재 계획을 발표함.
- 두 정상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Indo-Pacific)전략’을 공동 외교전략으로 표명했으며,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에서부터 인도양을 거쳐 중동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인도-태평양지역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있는 세계 성장의 선두”라며 “자유롭게 열린 상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서 극히 중요한 만큼 미일 양국이 이를 실천하는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 이어 정상회담에서도 일본과의 무역이 공정하지 않다며 압박을 가함.

■ 트럼프-아베 “대북 입력 최대한 강화”…한미일 공조 의견일치(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해 압력을 최대한 높여가자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으며 “미국과 일본에 한국을 더해 한미일 3개국 연대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 “지금은 북한에 대해 대화가 아닌 추가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아베 총리는 또한 “안전보장환경이 엄혹해지는 가운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미국의 방위장비품 구입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함.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있어서는 안될 일로, 북한의 악행에 대해 일본 국민과 함께 대처할 것”이라며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납치피해자들을 귀국시키면 멋진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발언함.

2017. 11. 7.

■ **‘이견보인’ 美日정상회담발표문..‘무역적자·주일미군’ 표현달라(연합뉴스)**

- 6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나온 두 정부의 발표문에서 무역적자와 주일미군 관련 부분이 서로 다른 것이 발견됐다고 도쿄신문이 7일 보도함.
- 미국의 발표문에서는 무역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일무역적자에 대한 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기록됐지만, 일본이 배포한 ‘합의 내용에 대한 자료’에서는 “(대일무역적자에 대한) 시정이 실현될 것을 확신한다”고 적혀있음.
- 주일미군 문제에 대해 양측의 발표문은 모두 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의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 이전 문제에 대해 “(헤노코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시설 이전이 늦어지면 평화와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으나, 일본측 발표문에는 아베 총리가 미군에 의한 사건과 사고에 관해 지역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적힌 반면 미국측의 발표문에는 이 내용이 없음.

■ **日언론 “미일정상회담서 대북군사행동 관련 논의 있었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기간에 미일 정상회담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미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5~6일 일련의 회담에서 북한정세를 둘러싼 유사시 대응을 상정해 미국이 취할 군사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함.
- 이 소식통은 어떤 사태를 상정하고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음.

2017. 11. 8.

■ **日관방 “北규탄·동맹국 수호’ 트럼프 국회연설 높게 평가”(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힘.
- 스가 장관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외국인을 납치하고 첩보원으로 일하게 한 점을 지적한 것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도모하는데도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함.

- 그는 “우리는 계속해서 미일, 한미일을 중심으로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관계국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강한 압력을 행사해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을 변화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함.

2017. 11. 10.

■ **트럼프, 아베에 “무역적자 해소 조속히 결과 내리” 압박(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7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무역 불균형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며 “빨리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교도통신이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9일 보도함.
-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거액의 대일 무역적자를 문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가을 중간선거 전에 성과를 내려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함.
- 통신은 두 정상이 지난 5일 함께 골프를 쳤던 사이타마(埼玉) 현 골프장 아니면 다음 날 도쿄(東京)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의 워킹런치(일하며 먹는 점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추정함.

다. 미·러 관계

2017. 11. 5.

■ **크렘린 “美-러, 북핵 관련 아무런 협력 안해…의견 교환만”(연합뉴스)**

- 러시아와 미국 간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간헐적인 의견 교환만 있다고 크렘린 궁이 4일(현지시간) 밝힘.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궁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미-러 간 북핵 공조에 대해 “아직 아무런 협력도 없다. 드물게 의견 교환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 페스코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0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면서 실제 회동이 이루어지면 두 정상이 북한 정세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함.

2017. 11. 7.

■ **크렘린 “푸틴-트럼프, 베트남 APEC서 북핵 등 논의 예상”(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이 7일(현지시간) 밝힘.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미-러) 두 정상이 모두 베트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회담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적 회담 내용은 협의 중이다”고 소개함.
- 페스코프는 두 정상이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가장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교환할 것으로 전망함.

2017. 11. 8.

■ **러, ‘북한 고강도 압박’ 트럼프 요구에 부정적 입장 밝혀(연합뉴스)**

- 러시아가 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주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기자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 변명의 시대는 끝났다. 세계는 핵 과멸로 위협하는 불량정권을 관용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북-미 간의 위협과 모욕 공방은 아무런 좋은 결과도 가져다주지 않는다”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함.
-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격하시키고 모든 무역과 기술관계를 단절시킬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 금수 구상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반대 견해를 밝혔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불이행을 전혀 바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압박과 제재, 봉쇄는 우리의 수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2017. 11. 9.

■ **크렘린 “북핵 해결 공조 트럼프 호소, 푸틴 견해와 같은 맥락”(연합뉴스)**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단결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연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견해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9일(현지시간) 밝혔.

-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 대표회담 연설에서 “모든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함께 단결하며 이(북한) 정권이 더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시진핑 주석에 감사하며 러시아도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하길 호소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이런 견해를 표시함.
- 페스코프는 “푸틴 대통령은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모든 관련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다”면서 “이와 관련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공조하자고 한 미국 대통령의 호소는 우리(푸틴) 대통령의 일관되고 잘 알려진 노선과 궤를 같이한다”고 강조함.

라. 중·일 관계

2017. 11. 9.

■ “야아베, 동남아순방서 中시진핑·리커창과 개별 회담 예정”(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동남아 순방 중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개별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9일 밝혔.
-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11일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열 계획이며, 이후 13일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기간 리 총리와 회담할 예정임.
- 산케이는 아베 총리가 한 번의 해외 출장 중 중국의 국가주석,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갖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아베 총리의 이번 회동에는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의 일본 개최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설명함.

■ 日관방장관 “중국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실행해야”(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미·중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거론한 것과 관련, 대북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속해서

중국에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는 중국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확실히 실행에 옮기는 형태 속에서 북한 정책을 바꿔간다는 방향성을 일관하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함.
- 스가 장관은 “대북 문제에 대해선 세계가 유엔 결의를 채택, 과거에 없던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며 “중국은 대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일컬어지며 무역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발언함.

마. 중·러 관계

2017. 11. 5.

■ 中·러, 북극해 항로 개발 ‘빙상 실크로드’ 구축 가속화(연합뉴스)

- 중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북극해 항로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이 5일 보도함.
- 중국 관영 환구망 등에 따르면 중국의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고위급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2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회담한 자리에서 ‘빙상(氷上) 실크로드’ 구축문제를 논의함.
- ‘빙상 실크로드’는 북극해를 이용해 유럽과 북미, 동아시아를 잇는 최단 해상항로를 의미하며, 시진핑 주석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또다른 한 축임.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1.6	WHO “북한 결핵 사망자 한 해 동안 두 배로”(자유아시아방송) 국제인권단체 “트럼프 DMZ방문해 北주민 책임진다고 말해야”(연합뉴스)
	11.7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여성수감자 성폭행 피해 심각...유엔이 압박해야”(미국의소리) 유럽에서 연이은 ‘북 인권’ 고발 행사(자유아시아방송)
	11.9	트럼프 한국 연설 전임 대통령들과 차별..북한 도발 인권침해 구체 사례들며 비판(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11.4	北, 美 대북 인권제재·태영호 美의회 증언 비난(연합뉴스)
	11.7	WMO “북, 올해 가뭄으로 식량 상황 안 좋아”(자유아시아방송)
	11.9	北, 트럼프 북한인권 성토 직후 “美, 인권 거론 자격없어”(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특이사항 없음.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1.5	中 선양서 탈북자 10명 공안에 체포, 송환 위기(연합뉴스)
	11.6	탈북민 강제복송 언급 없는 한중 사드 합의는 ‘헌법 위반’(연합뉴스)
	11.7	트럼프 “北, 납북자 돌려보내면 굉장한 신호”...대북 합의 주목(연합뉴스) 태영호 “중, 탈북자 송환 중단 & 국경 개방하면 북 붕괴 시간문제”(자유아시아방송)
	11.8	염수정 추기경, 하나원 방문해 탈북민 격려(연합뉴스) 캐나다 탈북자들 대규모 추방 위기...대책마련 부심 중(미국의소리)
	11.9	인권전문가·탈북자들 “트럼프 대통령 북한 인권 비판 환영”(미국의소리) 미 단체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탈북자 강제복송 문제 제기해야”(미국의소리)
대북지원	11.9	유니세프 “오바마 퇴임 직전 제공한 대북 지원금, 식수 사업에 최종 지출”(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11. 6.

■ WHO “북한 결핵 사망자 한 해 동안 두 배로”(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결핵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2017 결핵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는 2016년에 발생한 결핵 감염자 수와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담고 있음.
- 이 기간 동안 북한 내 결핵환자 수는 13만 명으로 한 해 전인 2015년의 11만명보다 2만명이나 늘어남.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1천명으로 그 전 해의 5천명의 두 배가 넘음.
- 성별로 보면 남자가 9만7천명, 여자는 3만4천명으로 남자환자가 여자환자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음.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들어 새롭게 ‘결핵 고부담 국가(TB High Burden Country)’군에 북한을 포함시킴.

2017. 11. 7.

■ 국제인권단체 “트럼프 DMZ방문해 北주민 책임진다고 말해야”(연합뉴스)

- 국제인권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휴전선(DMZ)를 방문할 것을 촉구함.
- 미국의 북한 전문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과 유대계 국제인권단체인 사이먼비젠텔센터의 에이브러햄 쿠퍼 부소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김정은의 공포 정치에 희생된 2천500만 북한인 대부분에게 ‘그들이 잊히지 않았다’는 신호를 주도록 DMZ이라는 연단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함.
- 또 “대통령의 DMZ 방문과 연설은 한국과 동북아 다른 나라 사람들의 평화, 자유, 안보뿐 아니라 미국 안보를 위한 노력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전례 없는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모든 시선이 남북한에 걸친 DMZ에 서 있는 대통령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함.
- 아울러 북한의 인권 탄압상을 열거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이런 심각한 인권 탄압 관행을 거의 묻히게 했다”고 덧붙임.

■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여성수감자 성폭행 피해 심각…유엔이 압박해야”(미국의소리)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에서 여성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성적 학대를 고발함. 구금시설에서 강제 복송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만연해 있다며 유엔의 개입을 촉구함.
- 북한 내 여성수감자들이 겪는 성적학대 등 인권침해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유엔이 나서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6일 촉구함.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는 8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 같이 주장하며, 인권 유린을 경험한 북한 여성 8명과 면담한 내용을 자세히 공개함.
- 이들은 모두 북한 내 수감 시설에서 인민보안성 심문요원과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구금 시설 교도관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성적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임.

■ 유럽에서 연이은 ‘북 인권’ 고발 행사(자유아시아방송)

-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북한 내 전반적인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행사가 영국과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잇달아 열리고 있음.
- 영국의 북한인권단체 커넥트북한(Connect NK)이 6일 런던에서 개최한 북한인권 행사(LDN Talk: Inside North Korea)에 160여 명의 영국 젊은이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고 이 단체 마이크 글렌디닝 대표가 밝힘.
- 글렌디닝 대표는 오닐스(O Neills)라는 런던의 한 맥주 집에서 행사가 개최돼 청중의 90퍼센트 이상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전문직 젊은이들이었다고 설명함.
- 6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훔볼트대학교에서는 한국의 북한인권학생연대와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이 공동으로 북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 유린을 고발하는 행사를 개최함. 탈북 대학원생 이지영 씨는 자신이 북한 군인으로서 겪은, 군대에서 상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성폭행 등에 관해 증언함.

2017. 11. 9.

■ 트럼프 한국 연설, 전임 대통령들과 차별…북한 도발, 인권침해 구체 사례들며 비판 (미국의소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행한 연설은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짐. 과거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구체적인 예시를

- 통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고, 북한의 도발 역사도 상세하게 설명함.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한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은 일단 ‘북한’이라는 단어의 언급 횟수가 전임 대통령들의 한국 연설 때보다 월등히 많았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북한’이라고 말하거나 북한을 의미하는 ‘정권’ 등의 단어를 40여 차례 써 가며 이날 연설의 주제를 사실상 북한으로 잡았음.
 - 특히 북한의 인권과 납치 문제, 남북의 경제적 격차, 미국과 북한의 분쟁 역사 등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와 표현을 총 동원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11. 4.

■ 北, 美 대북 인권제재·태영호 美의회 증언 비난(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와 인권침해 가해자 제재,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미 의회 증언 등을 ‘비열한 반(反)공화국 제재 압박 소동’이라며 비난함.
-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4일 대변인 담화에서 “물에 빠진 놈 지푸라기라도 잡는 격으로 미국이 조미(북미) 핵 대결에서의 연이은 참패를 만회하고 저들의 반공화국 책동을 합리화해보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고 있는 것이 바로 비열하기 그지없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힘.
- 협회는 최근 미국 재무부가 인권침해 관여 혐의로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3차 대북 인권제재를 발표하고,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침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을 거론함.
- 아울러 “미 국회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추악한 인간쓰레기를 끌어다 놓고 우리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증언 놀음까지 벌이며 반공화국 광대극을 연출하였다”며 태영호 전 공사의 청문회 출석을 우회적으로 비난함.

2017. 11. 7.

■ WMO “북, 올해 가뭄으로 식량 상황 안 좋아”(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북한의 극심한 가뭄이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 세계기상기구는 “북한에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평균 이하의 강수량으로 인해 쌀과 옥수수과 같은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힘. 이같은 사실은 세계기상기구가 6일 발표한 ‘2017년 세계기후 현황에 관한 세계기상기구 성명’에서 나옴.

- 이어 보고서는 북한에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전국 평균 강우량이 예년 평균보다 51% 낮았고, 이는 1973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사상 최저치였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기구는 다른 유엔기구들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 이 같은 기상이 변이 사람의 건강과 생명, 식량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함.

2017. 11. 9.

■ **北, 트럼프 북한인권 성토 직후 “美, 인권 거론 자격없어”(연합뉴스)**

-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 연설에서 열악한 북한 인권 실태를 성토한 다음 날인 9일 미국을 향해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함.
-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비열한 인권 광대극을 걷어치우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극도의 인간증오 사상이 만연하는 미국에서는 지금도 세상을 경악케 하는 끔찍한 강력 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 폐허 지대인 미국은 애당초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입에 올릴 자격이나 체면도 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침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재무부가 인권침해 관여 혐의로 개인 7명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이 아직도 반공화국 인권 소동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를 깎아내리고 우리의 제도를 말살하기 위한 용납 못 할 도발”이라고 비판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10. 30

-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11. 5.

■ 中 선양서 탈북자 10명 공안에 체포, 송환 위기(연합뉴스)

- 탈북자 10명이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遼寧)성에서 체포돼 북한에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지 공관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섬.
- 주 선양(瀋陽) 대한민국총영사관은 5일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 최근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 10명이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체포돼 현지 파출소 유치장에 수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힘.
- 신고자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선양 인근 모처에 숨어있던 탈북자들이 돌연 나타난 공안에 붙잡혔으며 이들을 도와 중국으로 탈출시킨 안내인도 함께 체포됐다’며 ‘이들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지 않도록 도움을 바란다’고 밝힘.
- 신고자는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는 3세 유아부터 6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며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룡징(龍井)시 삼허(三合)통상구와 두만강을 사이에 둔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온 일가족도 포함됐다고 설명함.
- 특히 체포된 탈북자들이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선양시 부근 모처에 대기하던 중이었다고 덧붙임.

2017. 11. 6.

■ 탈북민 강제복송 언급 없는 한중 사드 합의는 ‘헌법 위반’(연합뉴스)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6일 “정부가 최근 중국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합의를 하면서 탈북민 강제복송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함.
- 한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중국 측이 사드 보복으로 자행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복송 만행에 대해 중단 약속이나 사과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힘.
- 그러면서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반대 등 안보 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약속을 하면서 헌법상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외교적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함.
- 이들은 이어 “일본은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의 면담까지 마련했는데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임.

2017. 11. 7.

■ **트럼프 “北, 납북자 돌려보내면 굉장한 신호”…대북 합의 주목(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기간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이 이들을 돌려보낸다면 굉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일본 납북자 송환이 대북 외교에 새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CNN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한 공개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들을 돌려보낸다면 굉장한 신호(시그널)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무언가 매우 특별한 일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함.

■ **태영호 “중, 탈북송환 중단 & 국경 개방하면 북 붕괴 시간문제”(자유아시아방송)**

- 태 전 공사는 외견상으로 김정은 정권이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와 동시에 북한 내부에서는 엄청난, 예기치 않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함.
- 그러면서 태 전 공사는 지난 2010년 ‘아랍의 봄’은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함. ‘아랍의 봄’은 2010년 12월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촉발돼 아랍·중동 국가, 그리고 북아프리카 일대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운동을 말함.
- 이런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태 전 공사는 국제사회가 바깥 세계의 정보를 공급함으로써 북한 주민이 맞서도록 교육할 수 있다고 조언함.
-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이나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까지 김씨 왕조의 전원이 ‘신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함. 또한 태 전 공사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중국 측에 어떤 협력을 주문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국제난민협약에 위배되는 탈북자 강제 송환을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잘라 말함.
- 중국이 이처럼 탈북자들을 도와 한국으로 탈북 경로를 개방할 경우, 중국 국경에서 대규모 탈북이 발생해 북한 체제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붕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태 전공사는 덧붙임.

2017. 11. 8.

■ **염수정 추기경, 하나원 방문해 탈북민 격려(연합뉴스)**

- 염수정 추기경 등 천주교 주교단이 8일 경기도 안성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방문했다고 통일부가 밝힘.
- 서울대교구 대주교인 염 추기경과 조환길 대구대교구 대주교 등 주교단 일행은 이날 열린 제235기 하나원 교육생 수료식에 참석해 남한 사회에 첫발을 딛는 118명의 수료생을 격려함.
- 염수정 추기경은 격려사에서 “우리 사회의 정착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며 항상 선의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함.

■ **캐나다 탈북자들 대규모 추방 위기...대책마련 부심 중(미국의소리)**

-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한 탈북자들이 대거 추방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하고 있음. 서명운동 등 대책마련에 부심 중이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
- 캐나다 정부는 2012년 12월에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는 2013년 5월말부터 적용됨. 이후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짐.
- 실제로 캐나다 이민 난민국이 지난 6월 ‘VOA’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탈북자 218명이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인정을 받았지만, 2013년에는 13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2014년 1명, 2015년 2명으로 집계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단 1명도 없었음.

2017. 11. 9.

■ **인권전문가·탈북자들 “트럼프 대통령 북한 인권 비판 환영”(미국의소리)**

-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강하게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을 환영함.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함.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의 수전 솔티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세계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함.

■ 미 단체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탈북자 강제복송 문제 제기해야”(미국의소리)

- 미국의 북한인권단체가 중국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지에서 이뤄지는 탈북자 강제복송에 대한 우려를 전함. 탈북자를 위협에 빠뜨리는 강제복송을 중지해달라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당국에 직접 전달해달라고 촉구함.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 중에 탈북자 강제복송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냄.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멈추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불법적인 강제송환 정책을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음.
- 또 현재 중국에는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낼 경우, 목숨이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될 수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있다는 우려도 전함.

5. 대북지원

2017. 11. 9.

■ 유니세프 “오바마 퇴임 직전 제공한 대북 지원금, 식수 사업에 최종 지출”(미국의소리)

- 유엔이 올해 초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대북 수해 지원금을 모두 사용했다고 확인함. 함경북도 수재민들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데 집중했다는 설명임.
-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7일 사용 내역을 공개한 자금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월 임기를 하루 남기고 제공한 대북 수해 지원금임.
- 미국 정부는 당시 유니세프의 요청에 따라 1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정함.
- 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의 쉬마 이슬람 대변인은 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자금이 지난해 수해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수해지역에 수도 공급 시설 자재를 지원하는데 사용됐다고 밝힘.
- 또 해당 자금이 수재민들에게 수질정화제, 물통, 정수기 등 식수위생 물품 등을 공급하는데도 쓰였다고 설명함.